

최근 노인복지 정책 관련

들어가며..

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사회복지 정책 변화

공공중심, 대상자 중심의 포용적 복지체계 구축

공공중심의 사회서비스 제공

- **사회서비스 도입 10년..민간주도 시장화의 문제**
 - 과도한 공급자, 과다경쟁, 종사자 부당처우, 불법행위 등
- **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**
 - 공공이 직접 제공, 직접고용

지역사회 중심 대상자 중심

- **AIP(aging in place)를 위한 제도보완**
 - 커뮤니티케어, 노인맞춤돌봄 등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 강화

들어가며..

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주요 노인복지 정책

- 치매국가책임제
- **사회서비스원**
- **지역사회 통합돌봄**
- **노인맞춤돌봄사업**
- 노인장기요양보험 보장성 강화 등

주요 정책내용

사회서비스원

01 배경

- 과도한 시장화로 인한 영리추구와 이로 인한 서비스 질 하락
- 종사자의 부담처우 확대

02 의의

- 공공이 직접 책임있게 서비스를 제공
- 종사자의 안정된 지위 확보를 통한 서비스 질 향상

03 추진 상황

- 4개지역(서울, 대구, 경기, 경남)에서 시범사업 진행 중이며
2020년 10개 지자체 추가 도입 예정

주요 정책내용

사회서비스원

서울

국·공립 시설 5개소('22년 20개소), 종합재가센터 4개소 운영('22년 25개소)

- 2022년까지 관할 기초자치단체(25개소)에 종합재가센터를 모두 설치하여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 품질향상 및 제공인력 처우개선 유도

대구

국·공립 시설 9개소('22년 28개소), 종합재가센터 2개소 운영('22년 8개소)

- 대구시립희망원을 운영하고 기관 내 탈시설 전담팀을 구성하여 생활인들의 자립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

경기

국·공립 시설 10개소('22년 97개소), 종합재가센터 2개소 운영('22년 29개소)

- 다양한 공공센터*를 수탁하여 연계·운영하고 민간위탁 사업 종사자들의 고용안정성 제고
- * 노인보호전문기관, 노인일자리지원센터, 노인종합상담센터,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등)

경남

국·공립 시설 7개소('22년 25개소), 종합재가센터 2개소 운영('22년 8개소)

- '커뮤니티케어(지역사회통합돌봄) 센터'와 '종합재가센터'를 통합 운영하여 이용자에 대한 사례관리와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연계를 통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

주요 정책내용

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(커뮤니티케어)



· 시설중심의 보호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돌볼 수 있도록 함

· 가능한 완전하고 자립적인 삶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을 통해 인간다운 삶 보장

· 선도사업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노인 등에게 방문형 의료·요양·돌봄 등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여 대상과 지역에 맞는 서비스 제공모형을 개발하고자 16개 지방자치단체 에서 실시 중

주요 정책 내용

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(커뮤니티케어)

경기 부천

독거노인공동주거, 우울관리,
방문약료, 진료

전북 전주

입원전후 응급간병비, 요양등급전 가사지원,
주거환경 개선, 이동비 지원

충남 천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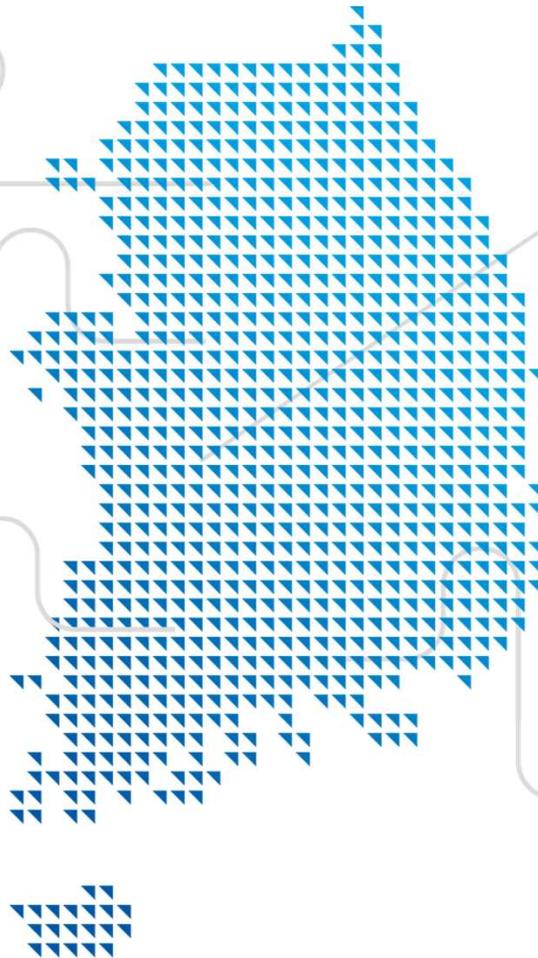
경로당 한의사 주치의, 복약지도,
사회적 경제조직 간 컨소시엄

경남 김해

틀니, 임플란트 지원, 콜택시, 주거개선,
통합돌봄 등

광주 서구

ICT 통합돌봄,
복합커뮤니티센터



주요 정책 내용

노인맞춤돌봄서비스

기존 6개 노인돌봄사업 통합 개편, 개인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

"6개 노인돌봄사업의 통합 개편"

- 노인돌봄기본, 노인돌봄종합, 단기가사, 독거노인사회관계활성화, 초기독거노인자립지원, 지역사회자원연계

2020년 1월부터 노인의 욕구에 따라 맞춤형으로 서비스 제공

- 이용신청의 어려움, 하나의 서비스 이용 등 해소

서비스 특징

- 서비스 다양화, 참여형서비스,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, ICT기술활용, 생활권역별 수행기관, 은둔형 우울형 노인 특화사업



주요 정책 내용

노인맞춤돌봄서비스

기 존		노인맞춤돌봄서비스	
돌봄기본·종합, 단기가사, 자원연계,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등 6종	사업 종류	‘노인맞춤돌봄서비스’로 통합	6→1개로 통합
3,100여 개소 (지자체 직영, 공모·지정위탁)	제공 기관	6~700여 개 권역별 책임기관제 (지자체 직영, 공모·위탁)	책임성 강화
35만 명 (독거노인 등 6개 사업 대상)	대상 노인	45만 명 (돌봄필요 취약노인)	+10만명
2,458억 원	예산 (국비)	3,728억 원	+1,270억원 52% 증
단순 안부확인·가사지원	제공 내용	욕구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(안전·사회참여·생활교육·일상생활 지원)	서비스 다양화, 수요중심
1.2만 명 (장기요양 검직(돌봄종합 2.7만 명) 제외)	인력	3만 명 (서비스관리자 0.2만 명, 생활관리사 2.8만 명)	+1.8만명

주요 정책 내용

노인맞춤돌봄서비스

서비스 다양화

- 기존 중복지원 금지로 하나의 서비스만 이용
- 필요에 따라 안부확인, 가사지원, 병원동행, 자원연계 등의 다양한 서비스 이용

참여형 서비스

- 집안에서만 제공되던 서비스에서 벗어나
- 사회관계 활성화를 위한 집 밖의 참여형 서비스(평생교육, 문화여가 등) 제공

맞춤형 서비스

- 맞춤형 서비스 - 선정조사, 상담, 제공계획 수립
- 주요욕구별 대상군 분류, 개인별 서비스내용 수립

첨단 서비스

- ICT(정보통신기술)을 이용한 안심서비스 제공

권역별 수행기관

- 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해 가까운 거리에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 강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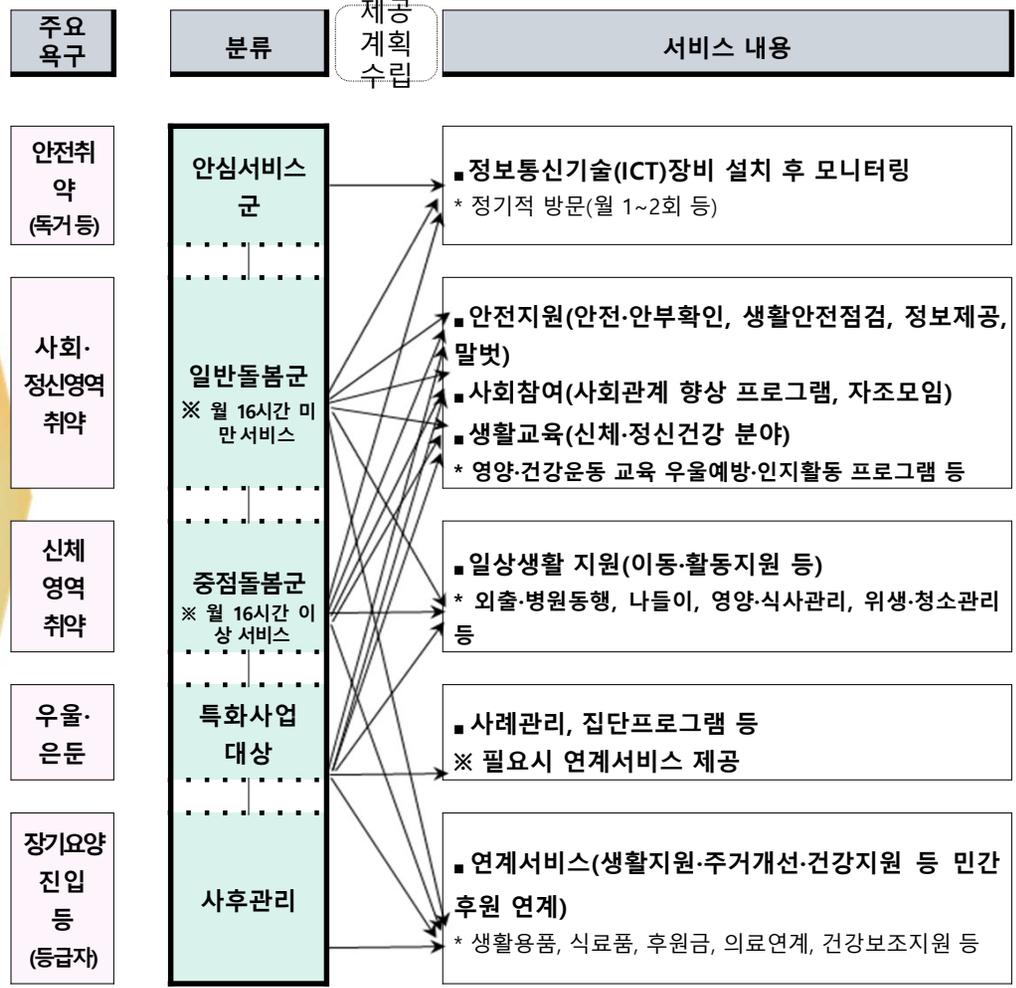
특화사업

- 은준형, 우울형 노인에 대한 특화사업
- 개인별 사례관리, 사회적 교류 지원

주요 정책 내용

노인맞춤돌봄서비스

사업명	조건	대상(가정)	서비스 내용	제공인력	제공기관
노인돌봄 기본서비스	→ 독거	29.5만	안부확인 및 후원 연계 * 주1회 방문, 주2회 전화	사회복지사 (531명), 생활관리사 (112명)	244개소 (복지관 등)
노인돌봄 종합서비스	→ 장기요양 등급외 A-B	4.8만	가사지원(월 9회 또는 12회) * 1회 3시간	노인돌보미 (26,664명)	2,129개소 (재가노인 복지시설 복지관 등)
단기가사 서비스	→ 수술 후 퇴원	0.1만	가사지원(1일 최대 3시간, 2개월 이내)	노인돌보미 (1,518명)	685개소 (복지관 등)
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	→ 우울·은둔	0.7만	사회관계 활성화 프로그램 (친구만들기 자조모임 등)	전담인력 (115명)	115개소 (복지관 등)
초기독거노인 자립지원	→ 초기 독거 (사별 등)	0.1만	자립능력 향상 프로그램 등 * 개인·집단프로그램	전담인력 (10명)	10개소 (복지관 등)
지역사회 자원연계	→ 장기요양수급 또는 등급외 A-B	0.7만	지역자원 (의료·복지 등) 연계	전담인력 (44명)	22개소 (재가노인 복지시설 등)



주요 정책 내용

노인맞춤돌봄서비스

구분		서비스 내용	
직접 서비스 (방문·통원 등) ※ 4개 분야	안전지원	▶ 안전·안부확인	- 방문 안전·안부확인 - 전화 안전·안부확인 - ICT 안전·안부확인
		▶ 생활안전점검	- 안전관리점검 - 위생관리점검 - 기타 생활점검
		▶ 정보제공	- 사회안전 정보제공 - 재난안전 정보제공 - 보건정보제공 - 복지정보제공
		▶ 말벗	- 정서지원
	사회참여	▶ 사회관계 향상 프로그램	- 문화여가활동 - 평생교육활동 - 체험여행활동
		▶ 자조모임	- 자조모임
	생활교육	▶ 신체건강분야	- 영양교육 - 보건교육 - 건강운동교육
		▶ 정신건강분야	- 우울예방 프로그램 - 인지활동 프로그램
일상생활 지원	▶ 이동·활동지원	- 외출동행지원 - 산책, 나들이	
	▶ 일상생활관리	- 영양·식사관리 - 위생·청소관리	
연계서비스 (민간후원자원) ※ 지역사회 자원 연계는 읍·면·동에서 우선 실시		▶ 생활지원연계	- 생활용품지원 - 식료품지원 - 후원금지원
		▶ 주거개선연계	- 위생지원 - 주거환경개선지원
		▶ 건강지원연계	- 의료연계지원 - 건강보조지원
		▶ 기타서비스	-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연계

주요 정책 내용

노인맞춤돌봄서비스

심사영역	심사항목	비고
A 법인의 공공성 (20점)	A1. 관내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동일 시군구 내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지 않는 법인	
	A2. 관내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동일 시군구 내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법인으로서 방문요양급여 제공규모를 감축(20%이상) 할 계획이 있는 법인(조치계획서 심사 필요)	
	A3. 관내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동일 시군구 내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법인으로서 방문요양급여 제공규모를 제한(유지)*할 계획이 있는 기관(조치계획서 심사 필요)	
B. 지역사회네트워크 (20점)	B1. 지역자원 발굴·연계	정성 평가
C. 효과적인 사업수행 (60점)	C1.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무공간, 상담공간 및 프로그램실을 확보하였는가? (필수 요건)	
	C2. 수행인력 외에 맞춤형돌봄사업을 담당하는 중간관리자를 배치 계획	
	C3. 기관 차량, PC, 프린터 등 사무기기를 보유하고 있거나 자체 비용으로 마련할 계획	
	C4. 유사사업 수행 경험	
	C5. 사업수행의 전문성 및 수행 의지	정성 평가
	C3. 사업비 집행계획	정성 평가
	C3. 사업계획 타당성 및 수행 가능성	정성 평가
총	100점	

주요 정책 내용

노인맞춤돌봄서비스

- **사업비**
- **도시형 : 수행기관별 돌봄 노인 당 약 월 6,500원 지원**
- **농어촌형 : 수행기관별 돌봄 노인 당 약 월 6,500원 지원**
- **특화사업비 : 고독사, 자살예방 사업 수행기관 연 1,800만원**
- **교육비 : 종사자 1인당 회당 약 5만원(연간 3~4회 교육)**

주요 정책 내용

노인맞춤돌봄서비스

- 수행인력
- 생활관리사 1명이 노인 14~18명(20%이내 중점돌봄)
- **서비스관리자 1명이 생활관리사 16명 관리**

	A권역(7개동)	B권역(4개동)	C권역(3개동)	D권역(4개동)
서비스관리자	4명	2명	2명	3명
생활지도사	60명	32명	32명	45명
운영비	56,235천원	56,235천원	56,235천원	56,235천원
인건비	1,082,880천원	573,360천원	573,360천원	812,160천원

QnA